

##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졸속적 정치전략(안)을 폐기하고, 노동개혁/구조조정/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졸속적 정치전략(안)을 폐기하고,  
노동개혁/구조조정/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씨는 광복절 연설에서 재차 사드강행과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최대계파 친박계 지도부의 환생에 따른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기 동안 레임덕은 없다는 듯이!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들은 여전히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대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따로 없을 것이다. 사드 부지 변경안으로 성주민심을 갈라치기 하고,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에 따른 투쟁을 공공 철밥통들의 투정으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 갑을과 유성의 용역강패 투입에 따른 반발 여론은 모르쇠로 일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불길한 징후들을 막을 길은 유일하게 민주노총의 투쟁뿐이다. 따라서, 8월 22일 휴가직 후에 개최되는 민주노총 대대는 무엇보다 9, 10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나 지금은 노동자 총 투쟁이 절박한 시기이다. 오늘의 대대 자리는 당면 투쟁과 함께 조직, 정치 등 민주노총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모색하는 자리여야 한다. 상층단위에서 졸속으로 튀어나온 '정당건설안'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

**대중조직 정치세력화의 기본 방향!  
노동조합(민주노총)은 투쟁 본연의  
정치세력화에 매진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세력화는 물론 민주노동당 건설의 경험이다. 그로부터 20년의 역사가 경과했으며 현재는 목도하듯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그것은 몰락과 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성격상 자본주의 체제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금노예 상태인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노동자 권력쟁취를 위한 정치세력화 방침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대중조직(노동조합)으로서의 고유한/독자적 투쟁과 특정한 정치행위를 통해서이다.

위력적인 정치총파업 투쟁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행위이자 정치세력화라 할 수 있다.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

정부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단언컨대 민주노총뿐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노동개혁 저지 투쟁을 통해 투쟁의 체질을 높여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 고통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믿을 수 있는 최대의 정치세력인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정세와 '진보/좌파' 세력의 상태를 감안할 때 201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행위가 매우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다. '총선 공투본'의 성과와 의의를 살려 201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좌파'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행위를 할 준비와 조직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정당건설이나 재편은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의 과제이며 민주노총은 그 과정에서 적당하고 적합한 역할을 찾으려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8/22 정책대대에 제출되고 있는 근거, 즉,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곧 정당 건설이라 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솔직하게 말하자!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당 건설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떠맡는 것일 수는 없다. 노동조합(대중조직)이 정치조직을 관장/리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행적인 발로일 뿐 바람직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일이다.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퇴보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정당 통합 및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민주노총 8/22 정책대대에 제출된 정치 전략 방안)

민주노총이 지난 민주노동당 창당 때와 같은 역할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조건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특정 정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당 건설을 주도하려는 민주노총이 지난날의 진보정당 오류를 짚으며, 패권적 당운영 극복, 현장중심성 강화, 의회주의 우경화 극복 등의 과제를 설정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전히 새롭게 건설될 '정당'(또 하나의 진보정당이 되겠지만)의 몫이다. 정당이 다수를 점하는 정파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들 다수 정파가 지난날의 역사를 반복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 중심성 강화, 민주노총 주도!'라며 주문을 외우면, 펄펄 살아 숨쉬는 '정파'가 켜지고 사라지는가?! 특히,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건설한 정당이 한국사회 계급구성과 모순을 허구적으로 분석하여 절대 다수인 노동계급 중심성보다는 노농민의 병렬적 연대를 강조하거나, 한국사회 변혁의 전략을 자본주의 철폐로 설정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개량과 정치개혁(야권연대포함)에 치중하고, 노동자 민주주의는 걸치레일 뿐 다수와의 전횡이 일상화되는 운영이라면, 이는 노동자 계급과 역사에 대한 더할 수 없는 죄악이다. 지난날 민족주의, 의회주의에 경도되었던 진보정당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렇게 흘러갈 개연성은 매우 높다. 4/13 총선 후부터 즐기치게 제기되고 있는 '진보대통합당(론)'의 태생적 한계는 여기에 있다.

또한, 정당건설을 민주노총이 주도하게 된다면 이는 '진보대통합(당)'을 위한 대중적 명분 혹은, 민주노총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단결과 통합'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조장할 뿐이다. 당면 투쟁과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정작 해야 할 역할은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단일정당'(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단결과 통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분화의 역사가 이를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지난 세계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보더라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단일정당'(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자체가 발전이나 진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중의 입장에서 정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으로서 이를 오히려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배타적 지지방침'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가 진행되기도 했다. 현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민주노총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위력적인 총 투쟁을 조직해 내고, 2017년 대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당문제는 그 결과 위에서 또는 그 과정에서, 그것도 정치조직 사이의 논쟁과 논의를 매개하면서 부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노동진선**